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축적 :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와 생산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안승국

한국의국어대학교

임혜란

이화여자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에 있어서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패권구조 및 국제분업구조라는 외생적 요소와 국내의 정치연합, 국가의 축적전략이라는 내생적 요소가 서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세계 자본주의 구조속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수단으로 생산의 국제화 뿐만 아니라 금융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와 국제금융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전의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규정을 단순하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주체로서 외적 구조에 내적 전략을 역동적으로 결합시켰던 것이다.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생산,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 전환, 1980년대 경제안정화 정책, 자율화·개방화 정책은 다국적기업의 확장,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석유위기,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지형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외생적 요인들이 처음에는 자본, 기술과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재벌위주의 양적 팽창, 산업구조의 불균형, 과도한 외채누적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부·대기업의 유착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자본축적의 한계를 노정시키게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투자가 동남아시아 및 중국에 집중되면서 한국은 점차 국제분업구조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제약에 따른 기술축적의 부족,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등으로 한국의 자본축적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제약한 구조적 요인은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근본적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업구조에서의 이탈,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적 민주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해 자본축적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급속한 자본축적과 주목할 만한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과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패권구조 및 국제분업의 변동과 국가전략의 상응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규정을 단순하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주체로서 외적 구조에 내적 전략을 역동적으로 결합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전개된 국제적 패권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출성장의 한계와 생산성 정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1980년대 초부터 남미 국가들에 있어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동아시아 국가들에까지 파급되어 재정적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도 생산성 정체와 금융위기라는 이중적 한계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위기 또한 국제적 패권구조의 변동에 따른 지형변화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성장과 위기는 국제적 패권구조, 국제분업, 국가의 축적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자본주의 구조라는 외생적 요인과 국내정치·경제적 지형이라는 내생적 요인 중 어느 한쪽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연구들도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지만 편향적인 분석이라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세계자본주의 구조와 국내정치·경제적인 요인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는 분석이 요청된다. 즉, 세계자본주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별국가에 어떻게 국제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자본축적을 이룩하게 되는지 또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따른 패권국의 전략변화는 어떻게 개별국가의 산업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적 구조와 내생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전략 및 산업전환의 연계 속에서 어떻게 한국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국제적 패권구조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의 선택에 따른 국제무역 및 금융질서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를 설명한다. 둘째, 이러한 세계자본주의 구조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으로서 산업정책을 통한 국가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산업화유형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 따라 규정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국가와 기업의 정치적 연합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에 의해 자본축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와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과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데 도입되는 이론들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전후 국제적 패권구조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노동집약적 생산을 통한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을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석유위기로 인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본집약적 생산중심의 축적전략을 논의한다. 제5절에서는 신자유주의체제 전환에 따른 한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전환을 설명한다. 제6절에서는 미국의 신패권전략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의 산업전환의 한계가 갖는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서는 본 연구를 간략히 요약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축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II.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와 생산의 이론적 연계

1. 국제적 패권론

국제정치경제의 패권구조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다. 첫째, 신중상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전개는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능력과 전략에 따라 가능했으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었다. 또한 자유주의적 질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반 또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즉, 강력한 군사력, 국제통화로서의 달러, 압도적 기술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패권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확장을 위한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조성했다는 것이다(Gilpin, 1987). 그러나 패권국의 과도한 해외투자와 체제유지 비용부담은 미국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과 1차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악화된 패권쇠퇴로 인해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할 의지와 능력이 약화되어 국제정치경제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으로 상호의존론에 따르면 전후 미국의 패권은 실질적으로 쇠퇴했으며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는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줄 지도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 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가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개별국가들이 복합적 상호의존의 맥락에서 협력을 모색했기 때문이다(Keohane, 1984). 즉, 패권국이 쇠퇴함에 따라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공공재를 집단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요컨대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재의 공급에 따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공공재 생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으로 신그람시주의에 따르면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있어서 생산과 교환이 국제화되면서 다국적기업과 다국적 금융기관, IMF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s)이 형성되고 있다(Gill and Law, 1988: 65). 이러한 역사적 블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자본이동과 시장개방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패권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패권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에 따라 국제정치경제체제는 패권적 질서에 놓여 있기도 하고 비패권적 질서에 놓여 있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의 세계질서의 속성은 국가-시민사회 관계수준에 뿐만 아니라 생산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그람시주의에 의하면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 생산이라는 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수준이 일방적으로 다른 수준을 규정하지는 않으며 세 개의 수준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구조적 영향력이 어떻게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 작용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생산주기론

국제적 패권구조에 있어서 개별국가들의 자본축적은 국제분업체제로의 편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산주기론에 따르면 선도산업의 형성과 쇠퇴는 노동의 생산성과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비교우위의 변화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도입-성장-성숙-쇠퇴의 과정을 거치는데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쇠퇴하는 반면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부상하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신상품이 도입되는 단계로서 신상품은 높은 생산비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의해 개발된다. 따라서 후진국은 이러한 신상품의 공급을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성장단계로 신상품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양상이 나타난다.¹⁾ 세 번째 성숙단계에서는 선진국의 내수가 감소하고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생산과정은 자본집약적이고 규격화된다. 규격화된 생산과정에서는 미숙련 노동력의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된다. 마지막 쇠퇴단계에서 생산품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재수출된다.²⁾

이러한 이론적 관점이 적용되는 동아시아 경제발전과정은 이른바 안향형(flying geese) 발전모델로 불리운다.³⁾ 1960년대 일본에서는 경제의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양산업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양산업은 한국이나 대만에 이전되었다. 일본의 성숙기 내지 쇠퇴기에 있는 산업들이 옌고나 상대적 저임금이라는 요인으로 동아시아에 이전되면서 국제분업의 지형이 변화되었던 것이다. 생산주기론의 유용성은 개별국가가 어떻게 국제분업과정에 참여하게 되는지 또한 개별국가가 왜 그 시기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즉, 생산주기론에 따르면 국제분업구조가 산업정책의 대안선택에 구조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업체제는 개도국에게 자본축적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수직적 분업에 의한 격차를 유지시키는 구조가 된다. 특히 국제적 패권구조는 이러한 수직적 분업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1) 후진국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다시 두 시기로 세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수입대체시기로, 수입을 국내에서의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는 수입대체산업화가 추진되고 두 번째 시기는 수출촉진기로서 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수출산업화가 추진된다.
- 2) 국제분업체제에 대한 이론에는 생산주기론(product cycle theory), 제품수명주기론(product-life cycle theory), 또는 CPC model(catching-up product cycle model)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며 단계의 설정도 각기 상이하다. 이 논문에서는 야마자와(Yamazawa, 1990: 27-31), 버논(Vernon, 1971), 그리고 허어쉬(Hirsch, 1967)의 논의를 종합하여 단계를 설명한다.
- 3) 안향형 모델은 일본이 선두에 서고 일본의 사양산업을 이어 받은 한국과 대만이 뒤를 따르며, 동아시아 국가 및 중국이 후미에 서 있는 분업체제이다(Yamazawa, 1990).

3. 국가주의론과 정치연합론

생산주기론의 한계는 개별국가의 산업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제약을 받는다는 경제적 요인만을 중시하고 국가의 역할 또는 국내정치와의 연관성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사실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강한 국가의 역할에 의해 산업정책이 수행되었기 때문이었다(Amsden, 1989; Wade, 1990; Evans, 1995; 안승국, 1997a).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국가는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국가주의론에 따르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이며 사회집단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회집단과의 이해의 일치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산업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집단으로부터의 지지와 연계는 필요하다(Migdal et al, 1994; Silva, 1993). 따라서 국가는 사회집단과의 정치적 연계를 고려하여 특정산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산업화 유형이 형성되는 것이다.⁴⁾

III. 전후 팩스 아메리카나와 한국의 노동집약적생산

2차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세계무역은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미국의 원조총액은 수출초과액과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미국주도의 무역구조는 50년대 후반 유럽과 일본이 전후복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즉, 원조를 통해 방출되었던 달러화는 무역수지를 통해 환류되지 않고 유럽에 누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또한 베트남전은 미국의 군사비지출을 급격히 증대시켜 미국경제의 우위기반을 침식시켰다(Keohane, 1984: 207). 더욱 심각한 문제는 흑자기조를 유지해왔던 무역수지가 1971년부터 적자로 반전되었다는 점이었다.

미국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이른바 달러부족 시기에 세계의 중앙은행으로서 국제수지 적자라는 기제를 통해 달러를 해외로 유출시켰다(Strange, 1985: 241).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달러채무가 증대됨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불안과 투기가 가열되어 1968년 3월 골드러쉬(Gold rush)의 강풍이 몰아쳤다. 이에 1971년 8월 닉슨행정부는 신경제정책을 표방하면서 달러화의 금태환정지를 선언하였다(Spero, 1990: 45). 닉슨쇼크로 불리우는 금태환정지는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체제의 위기가 표출된 것으로 달러화의 금 평가기준 재조정과 각국의 달러화에 대한 통화조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⁵⁾

4) 정치연합론은 국가를 단일하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인식하는 국가주의론을 비판하면서 권위주의 국가에서조차 국가는 산업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항상 사회집단으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국가의 선호도와 사회집단의 이익이 상호공존할 때 정치연합형성이 가능하다(임혜란, 1999: 273-274).

5) 고정환율제는 자유무역체제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폐기는 환율변동을 통한 관리무역을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는 1950년대 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의 경제원조를 기반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의 경제원조는 총수입의 70%를 지원했으며 국가재정소요의 73%에 달하였다(Haggard, Cooper and Moon, 1993: 298). 수입대체산업화는 외화지출의 억제와 국내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수입대체는 1950년대 후반 이후 경제원조의 규모가 대폭 감소되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1950년대 말부터 내수시장의 위축, 산업경험과 관리의 결여, 무역수지 불균형과 같은 수입대체산업화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1957년 8.8%이었던 GNP 증가율이 1960년에는 2.3%로 하락하였다(안승국, 1997a: 111).⁶⁾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수출지향산업화를 추진하여 1970년까지 평균 국내총생산성장률 8.6%, 평균 수출성장률 34.7%를 기록하는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Barrett and Chin, 1987: 32).

한국의 성공적인 자본축적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 기인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들은 실질임금의 상승, 생산성하락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에 접어들게 되자 자본축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개도국⁷⁾에 주목하게 되었다(안승국 1999a: 7).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생산자본이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신국제분업체제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었으며 상품의 생산과 수출을 용이하게 결합하기 위해 1970년 마산, 1973년 이리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였다. 국가는 수출자유지역에 공장설립, 원료수입, 상품수출, 외화의 입출금 등을 간소화시켰으며 생산비절감, 세금감면, 그리고 저임금노동의 공급을 통해 선진국의 생산자본을 흡수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산업정책기조는 수출주도 산업화였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수출우대금융, 수출생산용 중간재수입에 대한 비관세 및 관세감면(관세환급제)제도와 같은 수출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⁸⁾ 이러한 종합적인 수출지원제도는 1965년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폐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80년대 초까지는 기본골격을 유지하였다.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은 노동집약적 상품수출의 기반이었다. 이 시기의 노동의 특징은 저임금과 미숙련이었으며 산업노동 구성에 있어서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노동력은 저임금고용이 용이했고 순응성이 컸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1963년에 36%였던 생산직 노동자중 여성비율은 1973년에 41%로 상승하였다. 수출자유지역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통화체제의 변동은 전후 팍스아메리카나를 주장하며 자유무역체제를 건설하려 했던 미국 스스로 자유무역체제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 6) 수입대체산업화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지만 제조업의 성장과 민간부문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있다.
- 7)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과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컸다. 1970년의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19센트, 대만이 20센트였던 반면 미국의 시간당 임금은 3.35 달러였다(배무기, 1982: 594).
- 8) 이외에도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1973년 폐지), 수출용 중간재 국내공급자에 대한 관세 및 간접세 감면 등이 있다(안충영 · 김주훈, 1995: 324-25).

이 설치되면서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어 평가절하나 세금우대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한국은 수출자유지역을 거점으로 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서 저임금 노동력에 의해 부가가치를 생산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Benjamin, 1982: 1107), 외국투자에 의해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전량 수출될 것이 요청되었다.⁹⁾ 이러한 요구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 경쟁의 과열화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에 있어서 수출산업화의 성공은 지정학적 요인파도 밀접하게 관련된다(Cheng, 1987: 67). 미국은 2차대전 종전 이후 대소(對蘇) 봉쇄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 즉,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안보적인 성격이 강했다(구해근, 1985: 154-158).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막대한 경제원조¹⁰⁾를 지원해 왔는데, 1950년대 후반 달러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원조를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1958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도 감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로 원조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대신 수출지향 산업화와 투자정책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새로운 국제분업체제에 있어서 당시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생산공정의 하부 단계에서 저임금 노동을 이용해 대규모의 조립·생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국내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권은 정치적 정당성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수출진흥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량조립생산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박정희정권은 대량생산에 보다 적합한 대기업을 정치연합의 파트너로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육성하였다.

한국재벌의 형성은 박정권 이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국제자본의 유산이 초기의 재벌구조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은 일본인 기업을 몰수하였고 이는 다시 한국 정부수립에 따라 한국 정부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귀속재산의 불하는 당시 정치권력자 및 관료와 결탁한 자들에게 할당되었고 이는 한국 재벌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귀속재산 불하와 더불어 중요했던 요인은 미국의 대한원조와 정부의 재벌에 대한 원조물자의 독점적 할당이였다(유인학, 1991). 1958년에 국내 면직물산업을 독점한 기업은 여덟 개의 대기업으로, 이는 일본 식민지시기에 이미 대기업중심의 방직공업이 발전되었던 것에 기원된다.¹¹⁾

9) 이러한 점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현지생산과 현지판매에 중점을 두었던 남미의 사례와 대조된다.

10) 1953년부터 1959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연평균 2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다(구해근, 1985: 143-174).

11) 이 시기의 주요기업들로는 태창, 전남, 대한, 조선, 경방, 동양, 삼호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3만 개에서 6만개의 방직기를 보유하고 대량생산을 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당시 총 방직량의 85%를 차지하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했다(Menamara, 1992: 332-3).

1960년대 들어와 수출진흥을 위해 대기업과 연합을 구성한 박정희정권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섬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Lim, 1998). 섬유산업에서도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분야는 규모의 경제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화학섬유산업과 방직산업이었다. 1960년대 면방직산업은 수출업종으로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과 조세 및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의 중심도 가공부문에서 자본집약적인 소재생산부문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화학섬유공업의 발전으로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대기업중심의 발전이 지속되었다.

화학섬유산업은 섬유산업의 상향부문(upstream)으로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요청되는 부문이었다. 당시 일본 및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화학섬유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한국 등 개도국으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큰 어려움 없이 빠른 시일내에 산업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인조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석유화학산업의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기업은 산업부문의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였다.¹²⁾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미국의 다우화학회사와 합작을 통해 정유공장에 나프타분해공장을 병설하여, 제1, 2차 원료를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¹³⁾ 이와 같이 한국 섬유산업 및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은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양산업의 이전을 통한 국제분업질서의 편입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섬유산업의 하향부문(downstream)인 편직물, 가공·염색공업 및 디자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넘겨져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 기술 그리고 자본면에서 모두 열악한 저발전이라는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초래하였다. 가공 및 염색부분은 수출품목의 가격과 품질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발이 요청되는 부문이지만 국내에서의 정치·경제 역학관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었고 이후 한국의 섬유산업 발전은 소재생산의 발전과 가공영역의 저발전이라는 불균형적인 발전유형으로 특징지어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화는 섬유산업의 사례에서와 같이 선진국에서의 사양산업의 이전에 따라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국내의 정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발전유형이 불균형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12) 섬유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부문으로는 화학섬유산업과 방직공업이 있다. 특히 석유화학공업발전에 의한 안정되고 저렴한 원료공급은 화학섬유산업의 선행조건으로 상당히 중요했다(한국개발연구원, 1975).

13)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를 증류 또는 분해해서 에틸렌·프로필렌·벤젠 등의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제1차 공정, 이러한 기초원료를 중합 또는 혼합하여 저밀도 폴리에틸렌·고밀도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제2차 공정, 그리고 2차 원료를 합성수지·합성섬유·합성고무 등으로 가공하는 제3차 공정으로 분류된다. 당시 우리 나라는 제2차 원료를 수입해서 합성수지·합성섬유·합성고무 등을 제조하여 국내공급 및 수출을 해왔으나 총량이 유효 최소 생산규모이상으로 증대하면서 1, 2차원료까지 생산하게 되었다(김정림, 1990: 140).

IV.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한국의 자본집약적 생산

1970년대의 석유위기는 달러화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균열되고 있었던 팩스아메리카나 체제를 더욱 약화시켰다. 변동환율제의 도입 이후에도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달러화의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의 심화가 초래되었다. 인플레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석유위기에 따른 원유가격의 상승은 임금인상으로 전이되었고 잉여가치율은 감소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정체에 놓여 있던 생산성 상승률은 더욱 하락되었고 실업률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 시기의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위기관리는 두 가지 방안, 즉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1차 석유위기 당시 미국은 첫 번째 방안을 선택하고 유효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케인즈주의적 정책으로 국제신용화폐를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달러화의 통화량은 과대하게 팽창했으며 또한 석유위기 이후 미국은 무역수지 결손을 메꾸기 위해 달러화의 통화량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대된 달러는 석유 산유국들에 의해 이른바 ‘오일달러(petro dollar)’로 획득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미국 또는 다국적은행에 예치되어 개발도상국에 유입되었다(Krasner, 1978: 82-83). 오일달러 외에도 흑자기조가 정착된 일본과 서독의 대출자금도 유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석유위기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된 자본과 일본과 서독의 자본축적에 따른 자본은 과잉유동성이 초래되어 개발도상국으로의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입된 자본은 개발도상국에 과다유입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설비재 구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산업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효수요 증시정책은 생산성 상승이 수반되지 않아 인플레이를 유발시켰고 결국 비용을 증대시키게 되어 투자위축과 고용감소를 초래하였다.

제1차 석유위기는 선진국들의 선도산업이 자원절약적인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였다. 따라서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사양화가 진행되었고 사양산업은 개도국들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나 사양산업을 대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던 첨단산업이 사양산업에서 발생한 실업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를 동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내수확대와 기술개발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70년대 중반이후 잠정적인 성장국면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첨단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80년 초 세계 불황의 원인이 되었다(안승국, 1998b: 12). 제2차 석유위기부터 1982년까지는 이른바 통화주의 국면이었다. 통화주의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포기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 통화주의는 이자율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신용화폐의 창출을 억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시기에 미국은 위기관리의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고 인플레이에 대한 대응으로 달러화의 공급을 제한하였으며 개발도상국으로의 신용을 억제하였다. 또한 국제통화에 대한 조절은 해외유통달러(xenodollar)에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자율은 상승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이자지급 및 장기채무 상환을 위해서 고금리의 단기신용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개도국들의 외채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외채위기까지 초래되었다.

통화주의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도입된 긴축정책의 파장은 광범위했다. 개발도상국들 뿐만 아니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들도 거의 예외없이 1930년대 대공황을 방불케 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빠져들었다. 특히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채택한 영국과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선진국의 저성장은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를 초래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출성장을 지체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상환을 수출에 의존했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것이었다(Lipietz, 1984: 80-83).

<표 1> 주요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단위 : %)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1950-73	5.1	5.9	9.4	3.0	3.7
1973-84	2.2	1.7	3.8	1.1	2.3
1984-90	3.8	3.0	4.7	3.0	3.5

*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urvey*. 210. 1991

자본집약적 산업을 이전받은 개발도상국들은 제2차 석유위기에 따른 원유가 상승으로 원료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직면했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초래되었다. 오일달러를 흡수한 다국적은행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차관을 제공하였고 개도국들은 외채를 도입해서 외채를 갚는 악순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긴축재정과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석유위기에 따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축적 위기는 한국의 산업전환 및 자본축적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수출지향 산업화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원유가 인상으로 수입액의 규모가 늘어나 한국은 1974년부터 75년까지의 기간동안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실질임금이 크게 상승하여 저임금이 더 이상 비교우위로 작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기반은 상당히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개의 대안이 고려될 수 있었는데, 첫째는 경공업 내에서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기술 및 지식에 기반한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산업구조를 보면 이미 대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체제가 기반을 구

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중심의 산업발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정부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의 중점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산업전반에 대한 성장기여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철강·비철금속·조선·기계·전자·화학공업을 선정하였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에 있어서 국제 단위규모를 고려하여 대형화를 추진하였고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규모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김정립, 1990: 326).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또한 선진국의 사양산업의 이전에 따른 국제분업질서에서의 편입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 졌다. 즉, 선진국에서 자본과 기술집약도가 비교적 낮은 중화학공업이 사양화되고 있었던 추세는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세계은행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중화학공업화는 시기상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당시 일본의 사양산업이었던 철강산업의 이전과 부합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양국의 상호적 이익에 기초하여 1969년 일본의 자본과 기술합작에 의해 추진되었다(Cumings, 1987: 76; Yamazawa, 1990).¹⁴⁾

그러나 선진국의 사양산업 이전은 국내적 조건에 부합되어야 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역량과 의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여부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했다. 1960년대 말까지 수출산업은 원자재 및 중간제품을 수입해서 가공·수출하는 가공무역형태를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최종재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재 수입도 확대되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화는 수입생산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절감되는 외화를 다른 생산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요한 것이었다(김정립, 1990: 134). 또한 중화학공업화의 정치적 요인으로는 닉슨독트린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 계획 등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이 시급히 요청되었다는 점이다(Rhee, Jong-Chan, 1994).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가장 중요했던 산업정책은 금융지원이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금융체제 전반을 통제하면서 저금리 무한금융배급을 실시했다. 1975년부터 78년까지의 기간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5%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으며 은행용자의 상환기간도 8-10년의 장기였다(안충영·김주훈, 1995: 330). 이와 같이 본격화된 관치금융외에도 1975년 조세감면법 등 다양한 세제상의 특혜가 부여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1973년 제조업 총투자의 49.3%였던 중화학공업 투자가 1979년에는 68.8%로 증대되었으며, 그 결과 수출대체산업화의 선도산업부문이었던 섬유

14) 일본의 철강산업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까지 성장을 지속하다가 1974년 이후부터는 국내수요 및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이미 일본의 대미 철강수출은 voluntary export restraints에 의해 제약을 받기 시작하여 새로운 철강산업국의 추격에 놓여 있었다(Yamazawa, 1990: 105).

산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전자 및 전기기계부문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1965년에 총 제조업생산 중 38.2%였던 중화학공업비율은 1975년에는 48.4%로 증대되었다. 1961년 23%였던 제조업 부가가치중 기계와 화학의 비율은 1975년에는 39%로 증대되었으며, 1979년에는 공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54.7%에 이르렀다.¹⁵⁾ 이러한 결과는 산업노동의 구성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노동집약적 수출산업화 시기와는 달리 고속률, 상대적인 임금의 상승, 남성의 비율증대를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실질임금은 1970년을 기준으로 1984년에 한국에서는 2.8배 상승되었지만(Amsden, 1990: 30), 시간당 임금은 다른 신흥공업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¹⁶⁾

그러나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증대는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켰으며 중화학공업의 과잉설비투자와 경쟁력 결여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에 이어 중화학공업의 부실화는 한국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고 갔다. 1970년대는 수출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균형적인 산업발전보다는 저부가가치의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만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였던 것이다.

선진국의 축적위기는 생산자본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국제화도 초래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금융자본은 신용의 형태로 제3세계 국가에 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외채의 심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정부투자를 유지하고 중화학공업부문의 국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외채를 필요로 하였다(Amsden, 1989: 90). 한국의 높은 외채의존도는 직접투자의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제한으로 인해 산업화에 필요한 재정을 외채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남미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외채의 대부분을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동원했다. 1976년부터 79년의 기간동안 한국의 유로달러 신용총액은 73억 달러에 달했다(Frieden, 1981: 412).¹⁷⁾ 이로 인해 한국은 1980년대 초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에 따른 고금리와 상품가격하락,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는 침체국면에 빠졌을 때 전형적인 대규모 외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5.7%) 및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¹⁸⁾

15) 산업인구비중에 있어서 섬유공업의 비율은 1960년과 1973년에 각기 29.7%와 24.2%를 차지하였으나 1985년 15.4%로 하락하였으며 1960년에 1.6%에 불과했던 전자 및 전기기계공업의 비율은 1973년에 8.2%, 1985년에는 12%로 상승하였다(Deyo, 1989: 169).

16) 1980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1.10달러였던 반면 대만은 1.25달러, 홍콩은 1.51달러, 브라질은 1.73달러, 멕시코는 2.76달러였다(Deyo, 1987: 197).

17) 클라인(Cline, 1983)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82년간 신흥공업국의 채무증가 원인은 첫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석유가격의 상승, 둘째 1961년에서 1980년간의 평균을 초과하는 1981년과 1982년의 실질금리의 상승, 셋째 1981년에서 1982년에 걸친 세계적인 경기후퇴에 의한 교역조건의 악화와 수출량의 감소이다(Lipietz, 1987: 208-210에서 재인용).

18) 1980년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전두환정권의 임금억제와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었다.

V.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 한국의 기술집약적 생산

이른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영국의 노동당정부와 미국의 민주당정부의 기조였던 케인즈주의적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였다. 즉, 1970년대 후반까지 생산성저하, 인플레이션화와 실업의 증가는 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한 케인즈주의의 총수요관리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공급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안정적인 화폐공급을 지향하는 통화주의와 저축과 노동의욕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삭감을 지향하는 공급중시 경제를 핵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레이건정부 시기 동안 안정적인 화폐공급을 중시하는 통화주의 금융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했다.¹⁹⁾ 즉, 실질적으로 레이거노믹스 1년 8개월만에 경기국면에 따라 변화하는 금융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케인즈주의적 금융정책기조로 복귀하였던 것이다. 레이건행정부의 통화주의 금융정책으로부터 케인즈주의적 금융정책으로 선회한 원인은 1981년과 1982년간 통화주의에 따라 안정적인 통화공급을 실행했지만 금리는 급등했고 전후 최대의 불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통화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금리는 하락되지 않았고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완전고용이 실현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되었던 것은 케인즈주의적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지출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총수요창출이었다. 즉, 수요창출을 위해서 조세감면과 군수산업의 성장을 통한 군사지출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레이거노믹스는 조세감면과 국방지출확대 그리고 금융조작이라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조세감면과 국방지출로 인해 재정적자는 심화되었고 무역적자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상당규모의 달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금리를 상승시켰고 세계적 차원에서 투자를 축소시켰다(Gilpin, 1987: 155). 레이건행 정부는 달러화의 통화량을 증대시켰던 카터행정부와는 달리 필요한 달러를 해외로부터 유입하였다(Petras and Morley, 1995: 31). 이와 같은 미국의 해외유통달러 차용은 달러화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달러가치는 상승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외채에 고금리가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수산업에 투자를 집중시켰다. 군수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이며 기술수준과 자본규모에 있어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였다. 그러나 군수산업은 민간수요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했으며 과도한 군비투자는 인플레이션과 생산성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레이건행정부는 재정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예산을 삭감하였고 인플레이방지를 위해 통화긴축을 도입했으며 자본투자에 유리하도록 고달러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달러정책은 달러화의 평가절상효과를 가져와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재정적자(<표 2>

19) 스트레인지(Strange, 1986)는 레이건행정부가 국방비상승에 따른 재정적자를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화공급을 통제하는 통화주의가 작동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16-17).

참조)와 무역적자를 심화시켰다(Frieden, 1996: 127-128).

1985년 이후 미국은 가중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저달러 정책으로 전환했고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부문을 중심으로 수입개방 압력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는 무역마찰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었고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의 핵심 협상분야는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분야인 농산물, 지적소유권, 서비스산업과 일치했다.

<표 2> 1980년대 미국의 재정적자

(단위 : 억달러)

회계년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재정적자	-789	-1,279	-2,077	-1,853	-2,122	-2,207	-1,504	-1,551
세입	5,993	6,178	6,006	6,665	7,341	7,691	8,541	9,090
세출	6,782	7,457	8,083	8,518	9,463	9,898	10,045	10,641

* 자료 : 산업연구원, 세계경제동향, 제6권 2호, 104, 1988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은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 그리고 블록화되어 있는 EC에 집중되었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와 첨단기술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여 미국의 우위성을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수입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와 컴퓨터 부품, 담배,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의 일본시장 개방과 관세인하 압력을 가하였다. 이와 아울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엔화의 평가절상과 수출지향에서 벗어나 내수지향으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서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달러화에 대한 환율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미국은 이른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이 대상이 된 것은 80년대 중반 들어와 선진국들의 GNP성장률이 2-3%에 불과할 때 10%내외의 성장률과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나타나면서부터이다(이상환, 1995: 40-41).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80년대 중반부터 두각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원유가 안정과 1985년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 이후 미국의 저달러 정책을 계기로 일본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에 기인된 것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성장배경은 섬유, 신발, 조선, 전자, 자동차와 같이 선진국의 산업이전과 밀접히 연관된다.

미국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해 다양한 보복조치와 수입개방 압력을 가했으며 이들의 경제규모 확대를 명분으로 세계무역에 있어서 책임분담을 강조하였다. 압력의 형태는 농산물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 관세율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외환, 자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압력이었다. 이러한 압력은 다자간협상 뿐만 아니라 미 국내법의 적용과 같은

쌍무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신흥공업국들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달리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해 온 미국이 획득하는 이익이 크고 EC와 일본도 자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장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시아 신흥공업국들도 미국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1985년 GATT 특별총회에서 신라운드 개최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운드 개최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1986년 9월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데시에서 신라운드가 개최되어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까지 7년에 걸쳐 협상이 타결되었고 GATT의 뒤를 이어 WTO가 95년 1월 1일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국면에 있어서 심각한 국제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차별적인 수입개방 압력 및 보호주의 압력에 직면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 국가들 및 중국으로부터 거센 수출경쟁 압력이 가해지자 한국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본축적을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추진했다. 첫째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보호주의 경향에 직면하게 되어 수출성장의 하락을 초래하자 수출시장보다 내수시장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수시장의 성장이 비생산적인 건축과 부동산, 그리고 서비스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잉팽창된 내수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면 언제든지 경제위기가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표 3> 1990년대 한국의 제조업부문 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상승률

(단위 : %)

년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임 금	20.2	16.9	15.7	10.9	15.5	9.9	12.2
생산성	12.6	14.0	11.1	7.7	10.1	10.7	12.4

* 자료 : 통계청, 주요통계분석, 1997.

한국의 축적전략이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관계의 경직성으로 임금상승에 비해 생산성이 지체되었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즉, 주로 저임금 생산에 의존해왔던 축적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한국은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이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 외형성장을 지향했기 때문이다(안승국, 1999b).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증대시킨다고 해도 수익을 증대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생산성의 정체는 실질임금의 완만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인플레이 압력을 증대시킨다. 이

러한 상황에서 총수요에 중점을 두게 되면 임금상승이 더욱 심화되어 제조업부문의 수익을 감소시킨다. 또한 선진국의 산업이전은 수요를 부분적으로 창출했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수요가 증대되지는 않은 것도 소극적 전략을 선택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즉, 선진국에서의 수요가 주목할 만한 정도로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는 국내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과거와 같이 선진국의 산업을 이전받아 새로운 수출성장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하에서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한국간의 관계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의 산업전환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들이 한국을 더 이상 국제분업체제의 하부단위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1980년대부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한국을 사양산업을 이전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특정 부문에서 경쟁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대신 국제분업체제의 하부단위로서 한국보다는 동남아국가들이나 중국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선진국으로부터의 산업을 이전받아 산업전환을 도모하는 대신에 스스로 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대의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전자, 통신, 정보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전략산업으로 지정되고 육성된 기술산업은 생산주기론이 설명하듯이 선진국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산업이라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이었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이와 같이 국제분업체제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과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 즉, 1980년대에는 산업간 이전보다는 산업내에서의 저급기술의 이전이 가능한 분업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동안 기술산업내에서의 저부가가치 및 저급기술에 의거한 부분의 이전이 합작형태의 투자로 증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선진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기술집약상품의 생산이 증대되면서 해외기술의 도입비용이 상승되었다. 따라서 해외기술 도입에 의존에서 탈피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제품주기로 보아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놓여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회수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부 첨단산업 부문에서 한국 기업이 선진국의 기업들과 경합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회피하므로 해외기술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이전에 동의하더라도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선진국에 기술거점을 설립하여 기술정보를 국내에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켰다.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과잉 중복투자는 제2차 석유위기와 맞물려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중요한 위기의 요인

은 국내 생산자본체에 대한 보호장벽, 조세·금융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기업간의 과도한 투자경쟁, 그리고 투자규모 및 유인을 잘못 결정한 정책의 실패에 있었다(안충영·김주훈, 1991: 333). 따라서 전두환정권의 산업정책기조는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에서 벗어나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산업합리화에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의와 제한적 정부개입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은 어느 특정한 산업 및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기술개발 중심의 간접적이고 기능적 지원으로 기조로 전환되었다(유재원, 1991: 54-5). 또한 경제규모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산업구조 정책의 초점은 산업간 구조조정에서 산업내 구조조정으로 바뀌었다. 1979년부터 8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행된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목적은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의 전문화를 위한 중화학공업간의 합병 또는 축소에 있었다. 또한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르면 1985년에 종래의 개별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단일법률체제로 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부실기업정리의 경우 과도한 보호 및 특혜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경영다각화, 업종전환 등의 자구적 노력보다는 정부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심화시켰으며 또한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은 재벌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정부에 의한 보다 간접적·기능적인 기술산업 육성정책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 당시 경제성장에 의한 고도화된 경제구조와 정치적 민주화의 압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대기업중심의 저부가가치의 대량생산구조라는 구조적 한계는 보다 균형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를 필요로 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정책이라는 기조를 강조하게 되었다. 정부정책의 우선 순위는 그 때까지 성장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당시 거세게 불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망 등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형평 및 정의라는 측면도 정책에 고려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대기업 규제정책이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대기업이 전체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간의 독자적인 이익집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육성정책보다는 대기업중심으로 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기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VI. 미국의 패권전략과 한국의 경제위기 : 생산의 위기와 금융위기

미국은 달러화 약세가 수출증대 효과보다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지위를 위협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기조로 정책을 전환하고 첨단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였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투자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시켜야 했다.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고 금리인상압력을 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Spero, 1989: 119). 따라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WTO체제하에서 국가간 실물 및 금융자산의 자유방임적 거래질서를 구축했던 것

이다. 이와 같이 국제금융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잉여자금을 흡수할 수 없는 일본은 미국에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Petras and Morley, 1990: 79).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된 반면,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면서 달러화가 강세기조를 유지하게 되었다.²⁰⁾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기원은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적정 환율을 무시하고 엔화 가치를 조정해 온 것에까지 소급될 수 있다. 1994년 말까지는 엔화의 강세 하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이 유지되었지만 1995년 후반 이후 엔화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수지를 악화시켰다(안승국, 1998a: 6).²¹⁾ 한국에 있어서 금융위기는 1997년 8월 7개의 종합금융사가 외채상환을 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직면하면서 촉발되기 시작했다. 종합금융사의 외채상환을 위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달러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치는 외환보유고의 고갈을 초래했다. 이와 같이 단기외채가 장기투자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결국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1992년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1994년 LG를 비롯한 9개사, 1996년 한화를 비롯한 15개사의 투자금융사를 해외투자자와 외환운용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사로 전환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자금공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대기업의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은 급증하였다. 94년 355.7%였던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은 97년에 518.9%에 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미국의 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국내금리는 인플레이를 억제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표 4>에서와 같이 외채규모를 급격히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즉,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 저금리의 차관을 들여와서 국내기업들에게 대출을 하면 금리차만큼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은 단기차관을 대규모로 차입하게 되었다. 단기차관을 선호한 이유는 장기차관에 비해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높은 단기채무비율은 정상적으로 대출과 상환의 순환이 지속될 때에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순환의 흐름이 막히거나 지체될 때에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사실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금융기관들의 단기채무에 있었다. 즉, 국내기업들의 대출금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융기관들은 외채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원리금결제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조달하는 과정

20)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자본의 미국 집중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달러화의 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유출된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권시장이 폭등한 것은 유입된 잉여자금 때문이었다. 또한 자금이 증시에서 유출되더라도 그것은 다시 미국의 채권시장에 재투자된다.

21) 외환보유고의 부족에 놓여있지 않은 일본의 통화가치하락은 기본적으로 금융체제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90년대 초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 금융기관들은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러한 요인은 97년 말 일본의 증권사와 은행의 연쇄도산을 초래하였다.

에서 수요팽창을 불러일으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초래된 것이다. 또한 국내금융기관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안정한 동남아시아에 투자함으로써 달러화의 부족을 가중시켰다.

<표 4> 한국의 외채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년 도	1965	1972	1979	1984	1992	1997
총 외 채	206	3,589	20,500	43,100	42,800	120,800
총외채중 장기외채비율	98.5	82.2	67.8	73.6	56.8	57.6

* 자료 : 재정경제원, 각년도.

국내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국내기업들이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과 정권간의 긴밀한 유착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정경유착은 고비용의 정치구조로 인해 정치자금의 조달이 기업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초래되었다. 즉, 기업은 정치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금융특혜,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국유재산불하, 각종 인허가, 관급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특혜를 부여받았다.

또한 기업은 정치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은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비자금에 의해 조달되므로 탈세와 융자금 전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탈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융자금전용은 부실공사나 저질의 생산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특혜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관치금융'의 심각한 문제점은 대출이 정부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권간의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흥정이 가능했고 정권의 의사대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교환에 따른 금융제도의 파행운영이 금융의 정상적인 순환을 왜곡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대 경제성장의 둔화 원인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노동집약적 산업,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중화학공업처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도산업부문이 육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한국 산업발전에 기여했던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되면서 초래된 것이다. 일본은 임금수준이 높아진 한국이나 대만보다도 태국·인도네시아·중국 등 저임금 개도국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일본과의 분업구조에 편입되어 있던 대만은 지속적으로 남중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면서 대만산업구조를 기술적으로 단계도약을 추진하고 있다(Lee, Joseph,

1996).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분업교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미 외형상 선진국의 산업구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 이외에는 새로 진출할 산업부문이 많지 않다. 정밀전자나 유전공학과 같은 새로운 첨단산업에 진출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기술적 기반이 확고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아직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첨단산업기술은 전통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의한 기술보호주의는 매우 강력하다. 첨단산업부문에서의 기술개발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기술의 파급효과가 크고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대한 보호의 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첨단산업분야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안충영·김주훈, 347). 마지막으로 첨단산업분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역할이 중요한데, 1990년대초 정부가 산업구조조정 및 재벌해체를 시도하면서 이전의 정부·대기업간의 협력관계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대신에 기존산업부문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VII. 결 론

2차대전 이후 1950년대의 기간동안 미국은 무역부문에 있어서의 GATT와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를 양대 축으로 하여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이끌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막대한 경제원조와 냉전체제에서의 군사비부담으로 미국의 경제적 잉여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성이 노정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고정환율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통화체제의 와해와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로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신용팽창과 경기침체가 초래되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세계무역구도의 재편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에는 WTO가 출범하게 되어 미국중심의 국제적 패권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의 지형변화 속에서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과 한국내부의 정치·경제적 구조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1950년대 한국의 자본축적은 보다 정치적·안보적 성격이 강한 한미관계에 의한 대한원조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50년대 말 대한원조의 감소이후 한국은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실질임금의 상승, 생산성하락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에 접어들게 되자 자본축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개도국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생산자본이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선택되어 한국은 노동집약적 생산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제1차 석유위기이후 선진국의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경공업중심의 수출지향 산업화는 한계에 직면했다. 또한 제1차 석유 위기는 선진국에서 선도산업이 자원절약적인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였다. 따라서 중화학공업의 사양화가 진행되었고 사양산업은 개도국들에게 이전되었다.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전환은 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했는데, 이는 당시 선진국이 축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국제화를 시도함으로써 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촉진되어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높은 외채의존도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고자 통화부문에서 저달러, 엔고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무역부문에서는 쌍무협상 및 다자간협상을 통해 일본, 신흥공업국, 그리고 EC에 대해 개방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해 다양한 보복조치와 수입개방압력을 가하였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개방압력 및 보호주의 압력, 동남아 및 중국으로부터 수출경쟁압력이라는 이중적 구조의 압력에 놓이게 되자 기술집약적 생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이 시기의 한국의 자본축적의 특징은 중화학공업의 과잉투자와 석유위기가 맞물렸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수지적자는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긴축재정 및 경제안정화, 합리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특정산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하던 이전의 산업정책의 성향에서 벗어나서 간접적인 육성정책을 통하여 기술산업중심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능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대의 산업정책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고도화 현상과 정치적 민주화의 압력증가라는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었다. 즉, 이전의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발전에 의한 균형적인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모색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전환에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때 1980년 중반부터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에서 이탈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국과 일본의 투자는 동남아시아 및 중국에 집중되었다. 또한 이전에 경쟁력을 갖고 있던 저부가가치의 대량생산품목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이전의 비용증대와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로 인하여 한국의 축적전략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산업전환 생산의 위기가 심화되었던 구조적 상황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 원인이었다. 이러한 한계의 정치경제적 함의는 국제자본의 이동에 따라 개도국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한국과 같은 개도국의 자본축적은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정책변화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산업전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한국의 중간적인 위치를 활용해 후발국가들과 연계를 증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만이 지속적으로 남중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면서 산업구조의 기술적 도약을 추진하고 있듯이 한국도 적절한 투자지역을 선택하여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역으로의 투자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본격적인 성숙기에 들어선 전자·기계·자동차 등의 산업부문에서 제품차별화, 부품의 국산화, 생산공정의 개발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형 산업내 분업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생명공학과 신소재,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과학분야에 연구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고도화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발전을 병행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통계자료>

- 산업연구원. 1988. 세계경제동향. 제6권 2호.
 재정경제원.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1997. 주요통계분석.
 United Nations. 1991. World Economic Survey.

<논문 및 단행본>

- 구해근. 1985.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한국사회의 재인식 1』. 서울: 한울.
 김영봉. 1979. 『섬유·전자공업의 특성과 수급구조』. 한국개발연구원.
 김정렴. 1990. 『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회고록』. 중앙일보사.
 배무기. 1982. 「한국노동경제의 구조변화」. 『서울대학교 경제논집』. 제21권 4호.
 안승국. 1997. 「자본축적의 정치경제 : 세계경제의 구조변동과 신흥공업국의 축적사례」. 국제정치논총 36집 3호
 _____. 1998(a). 「동아시아에 금융위기에 관한 정치경제적 재성찰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비교」.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_____. 1998(b).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지형변화에 관한 국제정치경제적 재조명 : 2차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_____. 1999(a). 「한국에 있어서 포드주의의 위기에 관한 정치경제적 재성찰 : 조절이론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2호.
 _____. 1999(b).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 : 전략변화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세계화와 민영화방안 특별학술회의 논문집.
 _____. 1999(c). 「한국의 경제위기와 개혁방안 : 쟁점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국가개혁 특별학술회의 논문집.
 안충영. 1995.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 전략」. 『한국의 2001년 설계』. 김영호 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안충영·김주훈. 1995. 「대외지향 무역정책과 산업발전」. 『한국경제 반세기』. 차동세·김광석 편. 한국개발연구원

- 유인학. 1991. 『한국재벌의 해부』. 서울: 풀빛
- 유재원. 1991. 『한국·대만·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환. 1995. 「미국과 동북아 3국간의 무역분쟁 : 패권안정이론과 잉여능력이론의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5집 1호.
- 임혜란. 1999.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패턴과 경제위기: 산업정책과 정치연합」,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 한국개발연구원. 1975. 『섬유공업의 성장과정과 생산구조』. 연구·조사보고 제 75-21권
-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Global Fordism' or New Model?" *New Left Review*. No. 182.
- Barrett, Richard E. and Soomi Chin. 1987. "Export-oriented Industrializing States in the Capitalist World Syste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Frederic C. Deyo.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enjamin, Roger. 1982.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 *Asian Survey*. Vol. XXII No. 11.
- Bernard, Mitchell and John Ravenhill. 1995.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Rat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
- Bloom, Martin. 1992. *Technological Change in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Cheng, Tun-jen. 1987. "The Rise and Limits of the East Asian NICs." *Pacific Focus*. Vol. II No. 2.
- Cumings, Bruce. 1987.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 Frederic C.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eyo, Frederic C. 1987. "State and Labor: Modes of Political Exclu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Frederic C. Deyo.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Beneath the Miracle: Labor Subordination in the New Asian Industr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vans, Peter.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eden, Jeffery A. 1981. "Third World indebted industrialization: International finance and state capitalism in Mexico, Brazil, Algeria and South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5 No. 3
- _____. 1996.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Politics of Monetary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Robert Keohane and Helen V.

- Milner,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l, Stephen and David Law. 1988.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Problems and Poli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ggard, Stephan.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ggard, Stephan, Richard N. Cooper and Chung-in Moon. 1993. "Policy Reform in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in Economic Policy Reform: Evidence From Eight Countries*. Robert H. Bates and Anne O. Krueger, eds. London: Blackwell.
- Hirsch, Seev. 1967. *Location of Industr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xford: Clarendon Press.
- Keohane, Robert.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Chung-Yum. 1994. *Policymaking on the Front Lines: Memoirs of a Korean Practitioner, 1945-79*. Washington, DC: World Bank.
- Koo, Hagen, ed. 1993.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D. 1978. "United States Commercial and Monetary Policy: Unravelling the Paradox of External Strength and Internal Weakness." *Between Power and Plenty: Foreign Economic Politic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Peter J. Katzenstein, ed.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urth, James. 1979.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Product Cycle: Industrial History and Political Outco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3.
- Lee, Joseph S. ed. 1996. *The Emergence of the South China Growth Triangle*. Taipei: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 Lipietz, Alain. 1984. "How Monetarism has choked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New Left Review*. No. 132.
- _____. 1987. *Mirages and Miracles: the Crisis of Global Fordism*. London: Verso.
- 『기적과 환상』. 김종한 외 옮김. 서울: 한울.
- Lim, Haeran. 1998. *Korea's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Korea*. London: Macmillan Press.
- Mcnamara, Dennis. 1992. "Reincorporation and the American State in South Korea: The Textile Industry in the 1950s."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35 No. 2.
- Migdal, Joel S., Atul Kohli, and Vivienne Shue. 1994. *State Power and Social Forces: Domination and Transformation in the Thir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ras, James and Morris Morley. 1990. *US Hegemony Under Siege*. London: Verso.
- _____. 1995. *Empire or Republic: American Global Power and Domestic Decay*. London: Routledge.
- Piore, Michael J. and Charles F. Sabel.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Rhee, Jong-Chan. 1994. *The State and Industry in South Korea: The Limits of the Authoritarian State*. London: Routledge.
- Silva, Eduardo. 1993. "Capitalist Coalitions, The State and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Chile, 1973-88." *World Politics*. July.
- Spero, Joan E. 1989. "Guiding Global Finance". *Foreign Policy*(Winter).
- _____. 199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Fourth Ed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Strange, Susan. 1985(a). "Protectionism and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2.
- _____. 1986(b). *Casino Capitalism*.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Vernon, Raymond. 1971.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s*. New York: Basic Books.
-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amazawa, Ipei. 1990.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Honolulu: East-West Center.
- Yoon-Je Cho and Joon-Kyung Kim. 1994. "Credit Policies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World Bank Discussion Papers* 286.
- Yoshino, Fumio. 1993. "Korea's Textile Industry: From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Expansion to Industrial Adjustment." In Ryuichiro Inoue et al. ed. *Industrial Policy in East Asia*. Japan: JETRO.

World Capitalism and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linkage among the International Hegemonic Structure, State, and Production.

Ahn, Seung-Goo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m, Haeran

Ewha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has been affected by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factors such as hegemonic structur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and internal factors such as domestic coalition and industrial policy.

Korea, which was selected and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has taken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accumulate capital with preparing proper strategies. In the 1960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shifted the production site into the developing countries, to avoid the rise of wages and the fall of productivity. Korea, focusing on the production of low-value added, labor-intensive products, actively attracted foreign firms and accumulated capital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In the 1970s, after the first oil crisis, the HCIs (heavy-chemical industries) was declining in developed countries and transferred to developing countries. Korea again took advantage of this change through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from the light to the HCIs. In the 1980s, the U.S., which was concerned of chronic deficit of current account, changed from the high-dollar to low-dollar policy in the monetary area and pressed Japan and the NICs to open their domestic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also faced with the pressur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changed industrial policy from sector specific to neutral one and responded to these external and internal pressures with more general macroeconomic policies such as

stabilization policy and market opening and liberalization policy.

On the other side of token, during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unwanted problems such as imbalanced development of industrial structure, high dependency on foreign technology, weak financial structure, and huge foreign debt have been produced and acted as a structural constraint to further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1990s these problems have been worsened and Korea faced with economic bottleneck in continuing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As the U.S and Japan shift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and the South-East Asia, Korea began to be disintegrated from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needed to transform into high-value added 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The structural constraint made the transformation difficult and eventually become one of underlying reasons of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External factors initially provided Korea with an opportunity to access new capital, new technology, and new markets. But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hem,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have become too inflexible to adapt to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overcome the structural constraint, Korea needs to adopt a more flexibl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change its strategy of capital accumulation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one.

안승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한양APT. 7-507. Tel: 455-8028.

E-mail: sgahn97@netsgo.com/ahnphd@chollian.net.

임혜란. 이화여자대학교. 고양시 일산동 후곡마을 청구APT. 1406-904. Tel: (0344) 913-0008.

E-mail: hrllim@chollian.net